

“탈북자 심리”의 문화정치 분단정치와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절합*

이수정(덕성여대)

이 글은 2017년 현재 분단체제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타자화가 단지 냉전적 분단정치의 산물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주체형성과 맞물린 보다 복잡한 문화 정치의 산물임을 논의한다. 세계적 냉전체제 해체 이전 남북한 간 경쟁이 지배적이던 시기 한국사회로 들어온 “귀순용사”들은 그 자체로 남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존재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남한의 신자유주의 체제로 들어온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한 주체/시민(deserving subject/citizen)으로 재탄생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뿐 아니라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이 “사회적 통치”에 참여해왔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합한 시민, 즉 “자립자활능력”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로 재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통치의 과정에서, 사고, 행동방식, 감정, 말투 등 이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북한적 표식은 적국의 흔적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사회의 시민이 되기에 부적절한 특징들로 대두되었고, “탈북자 심리”는 교정과 치유의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분단체제가 그 자체로 고정된 정치적 공간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연동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마음의

* 이 글은 2014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14S1A3A204357). 이 글의 초고는 2016년 6월 23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SSK 국제학술회의 “Dialectics of (in)hospitality in Mind”에서 발표되었다. 이 회의에서 유익한 토론을 해 주신 김현미 선생님과 본고의 심사를 맡아 귀중한 조언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상태, 새로운 통치의 정서들을 구성해 나가는 시스템임을 고찰한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분단체제, 분단정치, 신자유주의, 담론, 통치, 생정치, 심리화

1. 들어가며

남북출신주민들의 접촉지대(contact zone)에서 현장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필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묘사를 매우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감정적이고 직설적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비방하는 데 익숙하다”, “책임감이 없고 의존적이다” 등의 성격·태도적 특성에 대한 기술에서부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에 이르기까지 주로 부정적 톤의 이야기였다. 또한 이러한 언설들은 종종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에 대한 담론 (“성격/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및 치유·교정담론(“치유·도움이 필요하다”)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언설들이 흥미로웠던 것은 꽤 오랫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온 필자의 경험에는 딱히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매우 자주 전형적인 방식으로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필자가 접한,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져왔던, 많은 학문적·실천적 장에서의 탈북자 심리 관련 담론의 성격 및 구조와 친화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실제 필자가 만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성격과 태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내적 다양성을 가졌다. 이는 모든 인간집단에 해당되며, 남한출신주민들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왜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은 주로 집합적으로 재현되는 것일

까? 그리고 왜 이러한 “집합적 특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교정·치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무엇보다 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특정 시점에서 두드러지는 것일까?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들에 답을 얻기 위한 탐색적 과정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격, 감정, 태도, 심리상태, 정신건강 등 심리적 요소에 주목하는 언설들을 통칭하여 “탈북자 심리 담론”으로 칭하고, 이러한 담론을 단순히 이들의 개인적·문화적 특성에 대한 중립적 재현이 아닌, 특정 주제와 주체를 구성하는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사회적 실천으로 분석한다.¹⁾ 그리고 이러한 담론이 구성되어온 배경과 담론의 효과를 살핀다. 특히 이 글은 탈북자 심리 담론이 분단정치와 접합된 신자유주의적 통치(neoliberal governmentality)와 주체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정치의 결과물이자 그 자체로 통치의 기술임을 드러낼 것이다. 즉 탈냉전신자유주의 시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통치는 더 이상 이들에 대한 국가기구 중심의 냉전적 타자화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민관 참여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들을 “돌봄으로써 통제하는” 생정치(biopolitics)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새로운 통치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가 문제화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냉전적 분단체제가 고정된 정치적 공간이 아닌, 항상 자신을 재구성하는 자본주의와 연동하면서 만들어 내는 마음의 시스템이기도 함을 주장하며, 남북 통합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에서 삭제된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적 특징과 주소에 대한 논의를 복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

1) 효과를 발생시키는 언표의 집합이자 대상을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실천으로서의 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Michel Foucault,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Pantheon Books, 1972).

힘과 관련된 보다 맥락화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자원과 연구방법

이 논문에서 활용되는 주요한 이론적 자원은 분단체제(division system), 분단정치(division politics),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통치(governmentality), 생정치(biopolitics), 심리화(psychologization) 등이다. 분단체제는 백낙청이 주창한 개념으로 남북한 상황을 단순히 냉전시대의 산물로 볼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면서도 세계체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체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기반을 둔다.²⁾ 이러한 정의는 분단을, 적대와 경쟁의 냉전 효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고정된 것은 아닌,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와 연동하여 새롭게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체제로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관련 한국사회의 담론을 분석하면서, 2000년대 들어 활성화된 이 담론이 분단냉전체제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이 시대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통치 시스템인 신자유주의와 관련됨을 논의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순기능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론으로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1970년대부터 대두하였다. 즉, 근대의 보편개념인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 역할 축소, 규제 철폐, 사유화 촉진, 복지정책 축소 등의 정책을 통해 당시

2)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서구 자본주의가 당면한 자본 축적의 위기 극복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미국 닉슨행정부의 경제 정책, 레이저노믹스의 근간이 되었고, 1980년대부터 영미의 헤게모니적 정책 속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후퇴로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³⁾

한편,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정치·경제 철학이나 정책에 제한되지 않으며, ‘사회적 에토스’로서 작동한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기 충족적 자아를 촉진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한다는 이상을 품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주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스며들게 하고, 자유롭고 진취적이며 스스로를 책임지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형성하는 사회통치양식이기도 한 것이다.⁴⁾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군주의 권력이 아닌, 삶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세심한 계산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의미의 규율권력, 즉 생명 권력(biopower)에 기반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권력은 주체를 특정한(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개인인 동시에 특정 집단의 익명의 구성원으로 생산하는 생정치(biopolitics)에 의해 현실화된다.⁵⁾ 이러한 의미에

3) 서동진, 『자유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 하는 주체의 탄생』(과주: 돌베개, 2008); 권수현,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과 문화 논리,” 김현미 외 엮음,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서울: 이후, 2010).

4) 송제숙, 『복지의 배신』(서울: 이후, 2016), 29쪽.

5) 푸코에 따르면 전자의 권력이 “죽이거나 혹은 살게 내버려두거나” 하는 주권권력이라면 후자는 “살리거나 혹은 죽게 내버려두는” 생명권력이다. Michel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Vol.1: An Introduction(New York: Vintage Books, 1990);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s: Studies*

서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자유주의적 전통 위에 있다. 즉 자유주의의 변형으로서의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다양한 기제를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상품성을 최대한 계발하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유로운 주체로 형성되도록 하며, 이는 곧 “개인의 자유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할 것인가를 규정함으로써 권력에 종속시키는 새로운 주체/예속화의 권력”⁶⁾에 의한 통치이다.

이러한 주체형성의 과정은 위에서 누르고 억압하는 권력에 의해서가 아닌 다양한 제도, 담론, 지식, 기술 등의 작동과 “사회 통치 행위자”들의 협력을 중심으로 사회를 관리하는 것이기도 하다.⁷⁾ 이러한 의미에서 Nikolas Rose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논의하면서 “국가는 정치권력의 유일한 장소가 아니”며 오히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권력의 효과”임을 주장하기도 했다.⁸⁾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사회의 권력도 다양한 민관협력, 사회적 통

in Governmentality(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1), pp.87~104.

- 6) 서동진,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과학』, 제61권(2010), 49~50쪽.
- 7) “사회 통치 행위자”는 송제숙의 표현이다. 그는 저서 『복지의 배신』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한 사례로서 어떻게 IMF “위기 상황”에서 (그가 “사회공학 실행자”, “지식 매개자”로 부르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을 설계, 규정하고 매개, 실행”함으로써 “사회적 통치”에 참여했는지 분석하면서 이들을 통틀어 “사회 통치 행위자”라 지칭한다. 『복지의 배신』, 33~34쪽.
- 8) 니콜라스 로즈(Nikolas Rose)·김환석, “니콜라스 로즈와의 만남,” 김환석 외 엮음,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경계넘기의 사회과학을 위한 탐색과 제언』(서울: 알렙, 2014), 98쪽. 한편, Randy Lippert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이 국가를 어떤 행위자로 보기보다는 특정한 통치적 실천의 역사적 효과, 결과 또는 잔여로 다룬다고 논의한다. Randy Lippert, “Governing Refugees: The Relevance of Governmentality to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Alternatives*, 24(1999), pp.295~328.

치를 통해 주체를 형성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구조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와 통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통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형성하는 관계 및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새로운 통치의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한편, 생정치의 대상은 신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도 포함한다. 인간 자아를 특정한 가치와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근대과학인 심리학은, 인간 내면을 측정·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며, 비정상성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교정과 치유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생정치의 주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⁹⁾ Nikolas Rose는 20세기를 심리학의 시대라고 단언한다. 이는 단지 20세기에 심리학이 근대학문으로 수립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적합한 개별적 인간과 집단, 그리고 사회에 대한 “진리”를 구성하고 조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¹⁰⁾ 심리학은 또한 개인의 특성과 잠재성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일에 투입하거나 교정과 치유를 통해 노동력을 유지·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친화적이기도 하다.¹¹⁾ Sapountzis와 Vikka는 이처럼 훈육적이고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던 심리학적 프레임이 근대사회의 진진과 더불어 상식이 되고 심리학적 언어와 개념이 일상적으로 사회적 행위자들의

9) Nikolas Rose, “Psychology as a Social Science,” *Subjectivity*, 25(1)(2008), pp.446~462.

10) Rose는 20세기 심리학의 발전이 “고통에 대한 이해와 치유,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대한 개념, 규율, 정상화, 개선과 교정의 기술, 아동 양육과 교육, 광고, 마케팅과 소비 기술, 그리고 공장에서부터 군대에 이르기까지 인간행동에 대한 조율 등에 주요한 사회적 영향을 끼쳤”음을 예로 든다. *Ibid.*, p.447.

11) Antonis Sapountzis and Kalliopi Vikka, “Psychologization in talk and the perpetuation of racism in the context of the Greek school,”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8, No.2(2015), pp.373~391.

해석적 자원을 구성하게 되는 과정을 심리화(psychologiz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우리 시대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나 특성을 내적인 심리적 요소로 환원해서 사고하고,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과 타자를 평가하고 또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심리학과 심리화 현상은 신자유주의와도 친화성을 가진다. 개인이나 집단의 내면적 특성에 집중하고 또 개입하며 이를 ‘과학적 진실’로 구성하는 심리학적 언어와 실천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 자기계발하는 기업가적 인간이라는 신자유주의 주체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Jeff Sugarman은 신자유주의와 심리학적 윤리의 관계를 다룬 글에서 심리학이 ‘사회 불안장애’, ‘긍정 심리학’, ‘교육 심리학’ 등의 개념과 치유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적절한 주체성을 구성하는데 기여함을 보여준다.¹³⁾ 이러한 개념의 공통점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끊임없이 경쟁하고 선택하며 그 결과를 스스로를 책임지는 개인이 인간본성이며, 정상이고,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행위자의 특정 성향이나 행위의 근간 혹은 개선의 지점을 바로 그 개인의 내부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학적 설명방식의 일상화, 즉 ‘심리화’는 자신을 돌보고

12) Nikolas Rose, “Psychology as a Social Science.”

13) Jeff Sugarman, “Neoliberalism and Psychological Ethics,” *Journal of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Psychology*, Vol.35, No.2(2015), pp.103~116. 예를 들어 그는 자신감, 충만함, 적극성 등을 더 가치롭게 여기는 신자유주의적 기업가 문화가 이전에는 수줍음으로 간주되었던 증상들을 ‘사회적 불안’으로 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심리학이 과학의 이름으로 수줍음을 병리화하고 문제의 근원을 개인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연루되었음을 논의한다. 또한 그는 긍정심리학은 행복을 개인 성취의 도구이자 목표, 즉 기업가적 프로젝트로 삼는다는 점에서, 교육심리학의 경우 자존감, 자기 규율, 자기 효능성 등의 증진을 통한 기업가적인 평생학습자로서의 심리적 역량 획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라고 평가한다.

향상시키려는 의지, 즉 자기계발의 의지를 통해 작동하는 권력인 신자유주의 통치의 핵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¹⁴⁾

북한이탈주민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적절한 주체로 구성하려는 ‘사회적 통치’ 과정에서도 이러한 ‘심리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의 양상과 효과가 이 논문의 주요한 연구대상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 구성하는 과정에 다양한 방식의 심리화가 개입함을 보여주려 한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이론적 자원에 기대어 분단이 만들어낸 타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들을 한국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로 형성하려는 생정치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이들의 ‘심리’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이들의 적응과 부적응을 설명하고 또 교정과 치유를 초대하는 기제로 활용되는지 논의함으로써, “탈북자 심리”의 문화정치를 분단정치와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절합이라는 맥락에서 탐구한다.

이 논문에서 활용한 주된 연구방법은 참여관찰과 면담을 포함한 민족지적 현장연구와 문헌분석이다. 필자는 2007년부터 북한이탈주민 관련 일과 연구에 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련 기관 및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고 민관 활동가들 및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성된 참여관찰 기록들이 이 논문의 주요한 자료를 구성한다. 더불어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SSK 연구단¹⁵⁾의 과제를 수행하며 실시한 민관 활동

14) 서동진,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15)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연구재단 SSK 연구단으로서 2014년부터 “남한과 북한의 마음체계 비교연구”를 진행해왔다.

가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식, 비공식적 인터뷰 녹취록이 활용되었다. 문헌 분석의 대상은 주로 탈북자 관련 교육 자료 및 전문가들의 글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자료들을 사실의 재현으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구성하고 특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담론으로 분석한다.

3. 분단정치와 분단언어¹⁶⁾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에 대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하나의 해석 틀은 “분단”과 “분단정치”이다. 남북한 분단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생산된 다른 “자아”를 가진 주체들을 생산했고, 분단과 적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체들이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진 집단의 성격, 태도, 감정성 등 심리적 특성이 규범이 되어 상대 집단을 타자화하는 ‘분단정치’가 수행된다는 설명 틀이 그것이다.¹⁷⁾

이러한 설명 틀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부정적 담론은 적대적 분단국의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넘어와서 위

16) 이 장 논의의 상당부분은 필자의 다음 글들에서 다룬 것이다. 이수정,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반도리포트』(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155~170쪽; Soo-Jung Lee, “Education for Young North Korean Migrants: South Koreans’ Ambivalent “Others” and the Challenges of Belonging,”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4, No.1(2011), pp.89~112; 이수정, “인도주의 분단정치: 민주화 이전 한국 사회 남북이산가족 문제,” 『현대북한연구』, 제18권 2호(2015), 121~164쪽.

17) 정향진의 다음 글이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졌다.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제11집 1호(2005), 81~111쪽.

태로운 위치성을 가진 이들을 타자화하는 언설로 볼 수 있다. 분단 상황 속에서 남북한은 “서로를 부정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정치”,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시 분단을 강화하는” 분단정치를 수행해 왔다. 필자가 Stuart Hall의 논의를 빌어 논의했듯 이때 분단 “정치”는 “사회의 다른 영역, 즉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과 분리된 공식 영역의 정치가 아닌 …… 문화·도덕적 영역을 포함한 ‘권력의 다양한 양상’으로서의 정치”를 의미한다.¹⁸⁾ 분단정치를 이렇게 정의할 때, 군사적 대결이나 정치적 경쟁만큼 주요한 구성 요소로 “분단언어”를 포함한 문화적 기제들을 들 수 있다.¹⁹⁾ 전효관에 따르면 분단언어는 “우리 혹은 적”이라는 이분법을 중심으로 “타자성을 억압하는 지배의 논리”이자 이에 근거한 극단적 언어사용이다.²⁰⁾

1945년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서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분단정치’와 ‘분단언어’가 지배하는 역사를 살아왔다. 이는 화해와 협력을 신조로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라는 다소 예외적 시기, 그러나 분단정치와 언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던 시기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살아가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분단정치·언어가 지배적인 사회

18) 이수정, “인도주의 분단정치: 민주화 이전 한국 사회 남북이산가족 문제,” 123쪽, Stuart Hall, *The Hard Road to Renewal: Thatcherism and the Crisis of the Left*(London & New York: Verso, 1988), p.3.

19) 전효관은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이 반공주의에 기반을 둔 권리 억압을 통한 축적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권력이 반북주의에 기초한 단일한 국민형성 전략을 시도했음을 지적하며, 그 결과 발생한 의사소통의 황폐화 현상을 분단언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전효관,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지,” 『통일연구』, 제2권 2호(1998), 68쪽.

20) 위의 글, 43~45쪽.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으로 규정되는 사회의 구성원이었다가 “우리” 쪽으로 몸을 옮긴 북한이탈주민들은 매우 복잡한 위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시민권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는 이주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용의 증표라기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체제세력’으로 규정하는 분단 정치·언어적 실천의 결과이다. “반체제세력에게서 구제된 국가 구성원”들로서, 한국사회로 진입하는 순간 “유예된 국민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하고 (남한 방식) 통일의 성패를 예고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따라서 다른 소수자 집단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²¹⁾ 그러나 이런 정책적 지원과 관심의 이면에는 이들의 존재성에 대한 근본적 의심과 “노골적 동화”라는 문화적 지배 장치가 존재한다. 즉 이들의 “자동적” 시민권은 여전히 일종의 “귀순”·“전향” 장치를 통과하여 획득되는 것이다.²²⁾

이러한 과정은 이들이 다른 이주민들과 달리 경험하는 입국초기 6개월 가까운 “집단구금”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 입국 후 이들이 우

21) 물론 남북의 권력관계 양상의 변화와 북한이탈주민의 숫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의미화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남북의 체제경쟁이 한창이고 소수 인원이 한국사회로 진입했던 1990년 이전, 이들은 남한의 우월성과 북한의 폭정을 증명하는 이데올로기적 상징으로 청송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물질적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권의 쇠퇴와 북한의 경제난 및 고립으로 말미암아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경쟁에서 남한이 자신감을 획득하고, 또 중국을 거쳐 대량 탈북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상징성과 관련된 가치는 줄어들었고, 지원정책도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이주자 집단에 비해 많은 정책적·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Soo-Jung Lee, “Education for Young North Korean Migrants: South Koreans’ Ambivalent “Others” and the Challenges of Belonging.”

22) 위의 글.

선적으로 거치는 곳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다. 통일부, 경찰, 기무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철조망이 감긴 2m 높이의 담장과 검은 옷의 경비원들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보안시설 중 최고 수준인 ‘가’급 시설이다.²³⁾ 이곳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1개월에서 최대 6개월(평균 3개월)까지 머무르며 (“보호를 받으며”) 자신이 진짜-조선족 등 비자격자가 아닌-북한출신이라는 사실과, 순수한 의도-즉 북한의 간첩이 아니라-로 한국에 왔음을 증언하고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대체로 생애사의 반복적 서술, 구글 맵 등을 통한 고향 지리정보 인지 검사, 경우에 따라서는 기정착한 지인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진실성·순수성을 확인 받는데 증언의 진실성이 의심될 경우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압박수사도 받게 된다.²⁴⁾ 이러한 과정을 통과할 경우 초기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공식명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23) 『국민일보』, 2014년 4월 7일, “르포-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첫 공개: 탈북자의 첫 거주공간… 조사실서 운명 결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208392>(검색일: 2016년 6월 1일). 원래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이던 이 기관의 이름은 2013년 소위 “유우성 간첩사건”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인권 침해 이슈가 제기된 이후 2014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었다.

24) 박서연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주요한 역할이 “보호결정”이라는 언어로 묘사되는 것에 주목하여 이 개념이 다양한 함의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보호” 개념은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하에서 억압받던 북한이탈주민이 그 정권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결백을 증명할 때 “복지대상화”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신문받을 때,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보호 대상으로 신분보호관 등 경찰시스템의 영향을 받을 때, 이는 표면적으로는 이들을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갖지만 이들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성에서 한국사회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러한 ‘보호’를 ‘감시’로 해석하는 이유기도 하다. Seo Yeon Park, “The Cultural Politics of Affective Bureaucracy in Service Delivery to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16), pp.142~144.

사무소)으로 이동한다.²⁵⁾

이후 하나원에서 3개월의 “교육생” 신분을 거친다. 하나원은 집체 교육 시설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보다는 내부 시설 이용과 이동 등이 자유롭지만, 딱 짜인 일과와 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개인 활동은 매우 제한된다. 외부와의 접촉 역시 제한되어 출입이 자유롭지 않으며 집단생활의 규칙을 어길 경우 정착금 삭감으로 대표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곳에서 3개월간 함께 생활하며 규범으로서의 한국사회 특징과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북한적 표식을 지우고 남한적인 것을 배우고 익히는 일종의 ‘전향’ 교육과정이다.²⁶⁾ 이러한 ‘전향’의 실천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필자가 만난 한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처럼 한국사회는 이들에게 “한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한사회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북한적 표식을 철저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적 요소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는 비수용적 태도를 보인다. 즉 “전향”을 요청하지만 이는 동시에 이들이 북한적 특징을 벗어던지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25)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의 공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며, 1999년 경기도 안성에서 개원하였다. 하나원 또한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지정된 ‘가’급 보안시설이다.

26) Soo-Jung Lee, “Education for Young North Korean Migrants: South Koreans’ Ambivalent “Others” and the Challenges of Belonging”; Hae Yeon Choo. “Gendered Modernity and Ethnicized Citizenship North Korean Settler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Gender & Society*, Vol.20, No.5(2006), pp.576~604; Byung-Ho Chung, “Between Defector and Migrant: Identities and strategies of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Korean Studies*, Vol.32, No.1(2009), pp.1~27.

것이다.²⁷⁾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격이나 감정 등 심리적 특성을 문제 삼는 담론은 이렇듯 이들에게서 지울 수 없는 북한적 표식을 발견하고 이에 근거해서 이들을 타자화하는 분단정치와 분단언어의 실천이다.

4. 신자유주의 규율정치와 심리화(psychologization)의 부상

“분단정치”, “분단언어”라는 설명 프레임은 이 논문의 서두에 소개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언설을 일정부분 설명해 주고 있지만 심리화의 부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을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 맞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주체로 만드는 과정이 이들의 몸과 마음에 개입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심리학적 통치 기술이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Greta Uehing이 미국사회에서 난민들을 “책임화(responsibilization)”하는 과정에서 심리학이 정치적으로 활용된다고 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²⁸⁾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에 대한 논의는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논의에서 두드러지는 두 가지 차원의 “심리화”와 조응한다.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이나 집단의 심리적 특성/상태를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심리적 특성 혹은 상태의 원인/배경에 대한 논의

27) 이수정,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61~162쪽.

28) Uehling은 미국 사회가 난민들을 미국사회에 적합한 주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심리학이 활용되며, 특히 “책임화”가 주요한 아젠다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Greta Uehing, “The Responsibilization of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Political Use of Psych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88, No.4(2015), pp.997~1028.

이다. 전자는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정적·병리적) 내면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한 후 이를 한국사회 부적응의 이유로 논의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러한 내면을 구성하는 환경에 대한 논의인데 이를 심리의 문화화라고 할 수 있다. 두 논의는 종종 이들에 대한 치유나 교정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이나,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지곤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 세계적 탈냉전의 상황 속에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다. 이는 기본적으로 1990년대 북한의 식량위기로 인한 탈북난민의 급증과 한국으로의 집단적 유입에 기인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특정한 통치의 대상이 되었음과 무관하지 않다. 학자들은 한국사회의 탈북자 관련 정책이 1990년대 후반 이후 크게 변화하였음을 지적한다.²⁹⁾ 냉전 체제 해체 이전 소수의 “귀순용사”들이 그 자체로 남한의 승리를 상징하는 존재로 대대적으로 환영받고 많은 보상을 받은 반면, 이제 급증하는 탈북자들은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한국사회의 시민으로 양성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시작된 이러한 정책들은 “인도주의”와 “통일역량강화”라는 원칙 위에 북한이탈주민들을 특별한 통치의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이 시기 다른 한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립 가능한 독립적이

29) 강진웅,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가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제45권 1호(2011), 191~227쪽; 윤인진, 『북한이탈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서울: 집문당, 2009); 정병호, “탈북주민들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0권 1호(2004), 33~42쪽.

고 생산적인, “자유로운” 주체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북한이탈 주민”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 통치대상의 탄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⁰⁾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자장에 포함되었다. 1970년대 서구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의 경우 1990년대 문민정부의 수립과 함께 붙어온 자유화의 움직임과 더불어 시작되어, 1997년 IMF 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이다. 고용의 유연화와 불안정성, 무한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무한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은 1990년대부터 활성화된 자기계발 담론에 호명되기 시작했다. “자기계발 담론”이란 끊임없는 경쟁과 자유가 중요해진 시대, 자본의 확장은 개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책임의 완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이데올로기를 말한다.³¹⁾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남한의 신자유주의 체제로 들어온 다수의 북한이탈주민 또한 이러한 체제에 적합한 주체/시민(deserving subject/citizen)으로 재탄생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정부는 다양한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를 형성하였다. 2008년 집권한 김대중 정

30) 이는 이전에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정책의 수립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카테고리가 발생했고, 그 효과로 특정한 통치의 대상이자 독특한 사회적 성격을 가진 주체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존재·집단이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1)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49집 1호(2015); 박소진,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 사회』, 제48호(2009).

부가 그 틀을 닦았는데, 한국사회의 사회정책 역사에 있어 김대중 정부는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이는 여러 학자들이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불행한 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시민들의 협력에 의해 구성된 자유주의적 정책이 IMF 위기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포획되어 오히려 사회의 신자유주의화를 확대재생산했기 때문이다.³²⁾ 송제숙이 외환위기 시기 김대중 정권의 사회정책과 담론을 분석하며 논의한 것처럼, 이 정권은 경제위기 속에서 “‘민관협력체제’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행위자 그룹의 성원과 자발을 통해” 특정한 주체를 구성하는 독특한 사회통치 방식을 이끌어 내었다.³³⁾ 억압적이고 폭력적 권력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협력에 기반을 둔 주체 형성을 통해 전체 인구를 관리하는 ‘통치(governmentality)’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 시기 기본적 틀이 마련된 탈북자 관련 정책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은 사회경제적 소수자이자 통일 관련 특별한 의미를 지녔었기 때문에 “민관협치” 즉 “사회적 통치”의 우선적 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성공적 정착’이 당시 세계화시대 한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상상되던 통일의 상을 가늠해보는 예고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³⁴⁾ 이후 탈

32) Byung-Kook Kim, “The Politics of Crisis and a Crisis of Politics: The Presidency of Kim Dae-Jung,” *Korea Briefing 1997-1999*(2000); 송제숙, 『복지의 배신』(서울: 이후, 2016); 이수정, “‘탈냉전 민족 스펙터클’: 2000년 여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민족문화연구』, 제59권(2013), 95~122쪽.

33) 송제숙, 『복지의 배신』.

34) 민주화 이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신자유주의적 경쟁력의 근거로 논의되었는지, 이 때 북한이 어떻게 변화를 통해 세계자본주의질서에 편입되어야 할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Minkyu Sung, “The biopolitical

북자 정책은 몇 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그 근본적 뼈대는 바뀌지 않은 채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과 정책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권력의 기술(technologies of power)”이 동원되었는데, 탈북자들의 심리에 대한 주목과 개입이 이러한 기술 중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민관협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을 재사회화하고 ‘독립적 주체’로 주조하려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관의 행위자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내면적 특성과 상처에 주목했고, 한국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심리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성공과 실패를 권력관계와 경쟁구조,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자아나 인간관계의 갈등과 관련된 문제로 제시하고 자아의 개조를 중용하는 각종 치유산업과 문화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³⁵⁾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문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틀로 심리화 담론이 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문제’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들이 쉽게 가시화된 데에는 이들이 민관의 사회 통치 행위자들에게 매우 가까운 관찰의 대상이자 통치의 대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남한사회 입국 직후부터 집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신문, 진단, 상담, 훈련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장애가 되는, 따라서 치유되어야 할 심리적/정신적 상처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가세하면서

otherization of North Korea: a critique of anti-North Koreanism in the twilight of neo-liberalism and new conservatism”(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2010); 이수정, “‘탈냉전 민족 스펙터클’: 2000년 여름 남북 이산가족 상봉.”

35) 정승화, “감정 자본주의와 치유 문화,” 김현미 외 엮음,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서울: 이후, 2010).

북한이탈주민의 내면에 개입하여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양성하려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만드는 일의 초점을 사회적 환경 구성에 두기보다는, 개인적 몸과 마음을 겨냥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심리적 문제는 북한적 그리고/또는 난민적 특징으로 일반화되면서 개인화/문화화가 함께 일어났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에 대한 주목은 (탈)분단 논리와 신자유주의 에토스의 결합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5. 통치에 개입하는 행위자들: 분단정치와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절합

이 장은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아에 개입하고, 그들의 “북한적 특성”을 문제 삼으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질서 속으로 포섭하기 위한 실천에 참여해 온 다양한 민관 행위자들의 관계와 언설에 대한 분석이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을 한국사회의 시민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규율적 거버넌스”³⁶⁾를 구성한 다양한 사회 통치 행위자들의 참여가 어떻게 분단정치와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절합의 성격을 띠었는지, 이들의 언설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가 어떻게 재현되고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언설의 발화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36) 강진웅,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거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191쪽.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민으로 재사회하는 과정에서 협력하는 대표적 사회 통치 행위자들이다. 하나원, 노동부와 같은 국가기구의 공무원, 민관협력의 또 다른 파트너인 NGO 활동가들, 탈북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생산하는 학자,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언론, 그리고 탈북자들 자신 등이 대표적인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과 지역사회에서 지원활동을 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학술적·실천적 담론을 형성해 온 전문가들의 관계와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³⁷⁾

1) 국가기관: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앞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 후 3개월을 지내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이들의 ‘보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기관으로서 분단정치의 문법이 지배적인 곳이다. 탈북자의 자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재사회화를 진행하는 첫 “교육”기관은 하나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탈북자 대상 공식 교육 프로그램 대다수는 철저한 “자아의 타자로의 내면화(internalization of self as other)”를 요구한다.³⁸⁾ 이 과정을 통해 북한적인 것을 부정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배치하여 탈각하게 만들고, 남한적인 것을 긍정적이고 우수한 것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요청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분단정치, 분단언어의 문법 속에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한국 자본

37) 언론과 탈북자 자신 등도 주요한 사회적 통치의 참여자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직접적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다른 논의 가운데 필요한 언설만 부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38) Frantz Fanon, *Black Skin, White Masks*. Translated by Richard Philcox(New York: Grove Press, 2008).

주의에 적합한 인간형(self)을 생산해 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⁹⁾ 이와 관련하여 하나원이 설립된 시기가 가장 친취적인 대북관계를 이끌었던 김대중 정부라는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교육양식과 내용이 분단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하나원의 수립이 분단정치를 공공연히 실천하던 군사정권이 종식된 후, ‘탈분단’ 정치를 작동시키고자 노력한 정부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단정치가 정부의 이념이나 명시적 의도와 관계없이 매우 견고하게 우리사회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앞서도 언급했듯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와 에토스가 지배하던 시기였고,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이 주요한 가치로 떠오른 때였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과 상황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하나원 등 북한이탈주민 교육과정에서도 자유주의적 사회질서와 에토스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 기준 총 392시간이며,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증진, 진로지도·직업탐색, 초기 정착지원 등으로 이루어진 정규교육 프로그램과 자율 참여형 보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진로지도·직업탐색이 174시간으로 가장 많고, 우리 사회 이해증진이 121시간,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이 4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은 한국사회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진로지도·직업탐색 강조는 취업을 통한 자립, 우리사회 이해증진 프로그램은 자아의 전환을 통한 한국사회에의 적응에 대

39) Soo-Jung Lee, “Education for Young North Korean Migrants: South Koreans’ Ambivalent “Others” and the Challenges of Belonging,” pp.98~99.

한 기대, 각종 검사, 상담 등으로 이루어진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이들의 내면의 취약함에 대한 인식 및 개입과 교정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하나원을 비롯한 남한의 국가 기관 대행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요구하는 인간형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새로운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의 하나원 교재를 살펴보기로 하자.⁴⁰⁾ 이 교재의 1장은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소 길지만, “들어가며”의 내용을 인용해 보자.

남북간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남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라는 점이다. 물론 북한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자유주의를 ‘날라리풍’이라고 하면서 자유방임 혹은 무질서 등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라고 하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다른 한편 북한에서는 절대 권력에 의해 통제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40) 하나원, 『새로운 사회생활』(서울: 양동문화사, 2008). 이 교재는 1장.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2장. 인권의 이해, 3장.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4장. 선거제도의 이해, 5장. 시장경제의 이해, 6장. 한국사, 7장. 통일노력과 통일한국의 미래, 8장. 관련국가의 역사 이해, 9장. 한국문화의 이해, 10장. 이성, 결혼, 가족, 11장. 생활법률, 12장. 지리 및 지역사회 이해라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7년 현재, 필자가 구할 수 있었던 하나원의 교재는 2008년 출간된 이 교재와 진로와 직업, 언어생활, 건강한 생활 등 세 권이었으며, 이 교재에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내용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2016년 버전과 부분적 확인 결과, 이 논문에 인용한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

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새터민들은 자율적 주체로서 권리를 찾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어색해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터민들이 민주주의를 곡해하여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는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이제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새터민들은 한국사회의 기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신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⁴¹⁾

먼저, 이 글은 북한에서의 삶의 역사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민주적 시민이 되기에 필수적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자유의 뜻이 “제 맘대로 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곡해하여 마음대로 하고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대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시각과 관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주요한 논점은 “자유”의 뜻에 대한 왜곡 및 권리의 과다행사에 대한 경고이며 제대로 된 자유는 의무를 수반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 “의무”는 “자신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다음 문장을 통해 그 의미를 확보하는데, 이 문장은 자기책임과 국가주의를 결합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일종의 국가주의와 자기관리의 사회적 에토스와의 결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외에도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한 독립적 주체로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는 자주 반복된다.

41) 위의 책, 15쪽.

이렇듯 하나원 교재 대부분의 내용은 남북한 체제, 사회, 문화의 비교라는 명목하에 북한적 특성에 대한 부정과 비판, 그리고 이의 대립항으로서 남한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한국사, 한국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불평등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 이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들을 자신·개인의 문제화 - 특히 능력이나 노력 부족의 문제화 -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그러나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당연한, 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에 적절한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하나원 교육이,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바람직한 인간이 되기에 얼마나 근본적으로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남북한 사회의 비교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데 아래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의 교재 중 “표준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로 제시된 내용은 그러한 문법의 궁극적 재현이라 할 만하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높기만 하거나, 빠르기만 하거나, 크기만 하거나, 거세기만 한 소리가 아니라, 높고 빠르고 크고 거센 소리로 말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이처럼 이들 요소들이 모두 혼합되어 있는 소리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들을 수 없게 만든다. 인내심이 필요할 정도로 신경이 쓰인다. 그 결과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음성학적 특징은 호흡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한다.⁴²⁾

이러한 진술은 북한사람들의 자아표현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말이 얼마나 의사소통에 부적절한 언어인지를 강조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상식적 차원에서 이해한다 할지라도, 한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호흡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의사소통에 부적절한 언어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기술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2000만 주민들은 모두 호흡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부정적 음성학적 특징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서로 간 의사소통에 있어 일상적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 인구집단을 타자화하는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고’와 ‘감정’, 그 문화적 양식에 대한 총체적 부정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극단적 타자화의 정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진입하여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초기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사고 및 감정과 표현에 대해 극단적 부정을 경험하며 남한 사람의 정동과 언어를 익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을 요청받는다.

동시에 이들은 하나원에서 우울과 PTSD 등 이들의 삶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예측되는 다양한 심리적 질병에 대한 진단과 교정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 2008년의 경우 당해 입소한 탈북자의 74%가

42) 하나원, 『새로운 언어생활』(서울: 양동문화사, 2008), 33~34쪽.

정신질환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⁴³⁾ 이 기사는 한 국회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하나원 정신과 진료현황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초부터 8월까지 하나원 입소자 중 74.0%가 불안장애와 외상후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 원인으로 탈북과정에서의 생명 위협을 들고 있다. 또한 이 결과를 근거로 당시 1명에 불과하던 정신과 전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해당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다. 한국사회에 입국하는 거의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쳐 가는 하나원에서의 다양한 심리진단 과정과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을 “근본적 내적 문제를 가진 존재”로 인지하게끔 한다. 이는 또한 때때로 언론이나 정부 보고서, 전문가의 논문 형식으로 공개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심리적 문제”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대중적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기여한다.

이렇듯 국가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타자화는 이들을 열등한 존재, 혹은 정상성에서 벗어난 존재로 규정하면서 자기규율을 통해 한국사회구성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요구한다. 이상화된 목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역량 있는 “자유로운” 개인이자,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주체로 변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대두된 이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는 이러한 과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43) 『조선일보』, 2008년 10월 1일, “올해 하나원 입소한 탈북자 74% ‘정신질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1/2008100100783.html(검색일: 2017년 6월 1일).

2)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가

북한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신자유주의적 시민권이 요구하는 자질, 즉 시장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개인적 기술과 가치를 최대화하도록 하는 과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상기된다. 하나센터, 고용지원센터, 복지관, NGO 등 다양한 민관 단체와 관련 활동가들이 이들의 “정착을 지원”한다. 이 때 정착은 자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이를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은 “자기 통제적 대리인”을 통해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통치의 전형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지원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훈육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NGO 활동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실시한 한 연구에서 이정은은 NGO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종의 ‘훈육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NGO 활동가들이 탈북자 지원 과정에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기여를 기본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일종의 순응적 주체로 훈육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⁴⁴⁾

한편 박서연은 민간위탁사업 형식으로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정착시설인 하나센터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이 센터 직원들이 어떻게 북한이탈주민에게 “독립적”이고 “자립자활하는” 신자유주

44) Jung-eun Lee, “Disciplinary citizenship in South Korean NGOs’ narratives of resettlement for North Korean refugee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38, No.15(2015), pp.2688~2704.

의적 주체를 구현하려하는지 분석한다. 그는 하나센터 자체를 비영리
감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하여 정부역할을 민간에 아웃소싱한
국가의 시민사회와의 “신자유주의적 파트너십”으로 평가하며, 이러
한 구조 안에서 활동가들이 신자유주의 복지 패러다임의 핵심인 서비
스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 탈북자 개개인이 요구/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
공)와 일반화(standardization: 국가적 수준에서 일반화된 서비스 제공)를 동
시에 추구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점을 논의한다.⁴⁵⁾ 또한 활동가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찾기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채택하며, 이
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주체 형성이라
는 과제를 수행함도 지적하고 있다.

필자가 연구과정에서 만난 많은 활동가들도 자신들의 과제를 유사
한 프레임에서 설명하였다. 아래 소개하는 10년 경력의 30대 활동가
의 얘기는 다수 활동가들의 입장을 함축한다.

나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들을 자립, 자활하게끔,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30대 여,
활동가)

그런데 위의 언설에서 ‘자립’과 ‘자활’에 대한 강조는 이 활동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신자유주의적 에토스의 실천을 기대함을 드러내
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게끔”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가 이러
한 기대의 성취가 쉽지 않음도 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통일의 역군”이라는 공적 역할을

45) Seo Yeon Park, “The Cultural Politics of Affective Bureaucracy in Service Delivery to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기대하는 활동가의 경우에도, 상상되는 통일의 비전과 그 과정에서 기대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 신자유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장애물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측면을 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통일대비 차원에서 탈북자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지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기술력과 북한 노동력이 결합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경쟁력이 있어요. …… 탈북자들은 통일 이후에 우리가 만날 북한사람들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 되어야 해요.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어야지. 그래서 자립 자활이 중요해요. ……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 셋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있는지 …….

(50대 남, 활동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자활을 통일을 위한 중요한 과정적 단계로 보는 이러한 언설은 북한이탈주민을 국가경쟁력의 도구로 인식하는 활동가들의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태도를 잘 보여준다. 동시에 위의 인용문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인드 셋’ 즉 심리적 특성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익숙한 삶의 문법이 통하지 않고 차별과 편견이 가득한 낯선 사회, 초경쟁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극히 미미한 이들이 일상을 꾸리면서 스스로를 자유롭고 생산적인 주체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지원 활동가들을 이들에게 신자유주의적 에토스를 전파함으로써, 즉 이들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자기계발의 주체로 변환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과제를 달성하려 한다. 이 과정 자체가 일종의 내면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밀착해서 이런 과제를 진행하다 ‘실패’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활동가들이 그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도덕성, 성격 등 심리적 요소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트라우마, 거짓말과 속임수, 과격하고 직설적인 성격 등이 자주 언급되며, 이러한 부정적 심리상태와 성격의 원인을 북한 체제에서 찾곤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언설이 개인적 사례에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이야기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심리의 개인화와 일반화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이다. 다음의 언설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김○○선생님은 한 직장에서 세 달을 못 가요. 물론 몸도 안 좋지만. 이 분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싸우고 그냥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차별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격지심도 있는 것 같아요. 탈북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차별한다 싶으니까 꼭 차별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에게 하는 식으로 뭐라고 해도 욕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욕해요. 성격들이 썩어요. 북한에서 생활 충화를 계속 해서 그런지. 그렇다고 들 하는데 …… (30대 여, 활동가)

이 활동가는 본인이 경험한 한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건강문제와 차별경험의 가능성도 언급하지만 자격지심과 욕/썩 성격에 더 큰 혐의를 두며, 이를 생활충화에

서 비롯된 북한 사람들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한편 아래 소개할 활동가의 언설은 한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부정수급”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잦은 거짓말 이슈로 일반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조직생활 문제로 연결시킨다. 흥미로운 점은 이 활동가가 복지 부정수급을 “눈감아 주는” 이유로 이 북한이탈주민이 “알바 몇 개씩 하면서” 성실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든다는 것이다.

정○○씨도 수급비 계속 받으려고 거짓말로 남편 없다. 그런데 남편 없는데 애는 또 생긴다 말이에요 애는 그럼 어떻게? 애는 그냥 어떻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바 몇 개씩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그냥 알고 눈감아 주는 건데.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조직생활을 쉰까 하니까 [거짓말은]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50대 여, 활동가)

이처럼 활동가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적” 사례들은 그들의 개인적·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해석되고 다시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으로 일반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언설은 “현장전문가”들인 이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이슈를 파악하려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도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구성한 “과학적 지식”은 다시 활동가들의 경험을 설명하는 프레임으로 작용하여 “탈북자 심리”가 구성되는 데 일조하는 순환적 고리가 형성된다.

3)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유의미한 인구를 차지하면서 정신의 학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도 북한이탈주민들의 행태와 내면의 관계,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생산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통치에 참여해왔다. 이들의 연구는 많은 경우 연구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 등에 있어서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들의 협조하에 진행되었고, 연구 결과는 다시 또 정부 정책 입안이나 민관 활동가들의 실천에 기반이 되었다. 일부 전문가는 하나원 등 정부 기관에서 직접 일하면서 그 결과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잣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상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토대적 역할을 해 왔다. 북한에서의 경험과 이주 과정에서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정신병리적 상황과 문제적 심리 등을 도출해내고, 이를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전환하기에 근본적 제약이 되는 이유로 논의하거나, 이들의 내면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나 정책 전환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요구하는 자립과 책임성이라는 윤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의 “병리적 행동양식과 그 근저의 심리상태”의 부정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성민규에 따르면 정신의학자들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병리적 상황을 지적하고, 억압적 북한 체제, 이주 과정에서의 상처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북한이탈주민들의 일탈적 행위와 부적응의 원인, 즉 이들이 모범적이고 건장한 시민이 되는 데 근본적인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였다.⁴⁶⁾ 즉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독립적 시민이 되기에는 심리적 역량이 부족”

한 것으로 담론화하였다.⁴⁷⁾ 물론 성민규가 적확히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논의의 목적이 단지 북한이탈주민들을 타자화하기 위함이 아닌, 이들의 (부정적) 행태를 맥락화 함으로써 남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이들을 한국사회에서 동등한 주체로 살아가기에 결함이 있는 타자, 부적절한 시민으로 낙인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때로 정신의학자들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통치에 참여해 왔다.⁴⁸⁾ 실재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심리학회지의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게재논문

46) Minkyu Sung, "The biopolitical otherization of North Korea: a critique of anti-North Koreanism in the twilight of neo-liberalism and new conservatism." 성민규는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반북주의의 연속성을 분석한 이 논문에서, 자립(self-autonomy)과 자기계발(self-promotion)을 한국사회의 성공적 적응의 기준으로 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의학적 담론을 일종의 문화적 타자화의 정치로 분석한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의학적 접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전우택의 글을 주로 분석한다. 전우택의 대표적 저서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서울: 오름 2000);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47) 위의 글, p.127.

48) 대표적 심리학자로서 김희경, 조영아, 채정민 등이 있다. 대표적 저작은 다음과 같다. 조영아,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1호(2009), 285~310쪽; 조영아, 전우택,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0권 1호(2005), 17~35쪽;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2호(2005), 467~484쪽;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귀인양식: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2권 3호(2006), 1~22쪽; 채정민, 한성열,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9권 2호(2003), 101~126쪽.

을 전수 조사하여 그 경향성에 대해서 논의한 금명자에 따르면⁴⁹⁾ 2000년 이전에는 북한이나 북한사람, 통일과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증하였다. 이후 2013년까지 출판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논문은 총 50편으로 그중 70%인 35편의 연구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관련 연구였다. 그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특성이 남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연구자 3인이 총 28편의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이들이 모두 통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근무 경력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담론)와 정부정책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총 56편의 논문을 분석한 한나와 이승연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이 심리학계에서 직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이후라고 지적한다.⁵⁰⁾ 이들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심리학 연구의 주된 관심이 남한사회 부적응과 정신병리에 있었음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 관련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우울이고 그 다음이 외상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렇듯 연구주제의 편향성 외에도 기존 연구들의 다양한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49) 금명자, “한국심리학회의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13)”, 『한국심리학회지』, 제34권 2호(2015), 541~563쪽. 이 글은 해당 시기 『한국심리학회지』에 실린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전체를 분석한 것으로서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자 등의 글도 포함되어 있다.

50) 한나, 이승연,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34권 2호(2015), 485~512쪽.

모두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긍정 혹은 부정 왜곡 경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등 자료수집 및 측정에 있어 문제가 있고,⁵¹⁾ 둘째,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이탈주민 집단을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한 경향이 있으며, 셋째,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별 편향성이 있으며, 넷째, 비교 대상이 부재하는 것 등이다.

이는 지금까지 상당수의 탈북자 심리 관련 연구가, 이론적·방법론적 엄밀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부정적 이슈 - 부적응과 정신병리 -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논문은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부적응과 정신병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공중보건인과 전문상담사의 채용이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하나원 정신과 진료비율이 약 20배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하고 있다.⁵²⁾ 이러한 논의는 상당한 편향성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 과학적 진실로서 강력한 실천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51) 자기보고식 척도는 이 논문에서 지적한 확증편향성으로 인한 자료의 타당성 문제도 있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검사에 노출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문제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 논의될 것이다.

52) 2004년 공식적으로 하나원 내 “하나의원”이 개설되었으며, 2008년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되었다. 이후 앞서 인용한 당해연도 하나원 입소자 중 74%가 정신질환에 시달린다는 기사가 등장하였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1/2008100100783.html, 2010년에는 정신적 외상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이 3년 전에 비해 117배 증가하였다는 기사도 등장하였다. 『국민일보』, 2010년 10월 5일, “탈북자 정신치료, 2년만에 117배 급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182922&code=30802000>(검색일: 2016년 6월 1일).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는 개별연구 그 자체로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에서 비롯된 선의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이 집합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동이나 경험을 심리화·병리화하는 담론으로 작용하고 구조적 문제나 집단 간 과정을 개인 내적 이슈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관련하여, 이들의 정신병리적,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진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 자체의 문제에 대한 고려나 성찰이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하나원의 경우, 한국 사회 입국 이후 6개월에 이르는 집체생활을 해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답답함과 사회진입을 앞둔 상황에서의 불안함이 증폭되는 장소이며, 이들의 과거나 북한적 특성이 비하되거나 부정되고 새롭게 “우울증”, “트라우마”, “공황장애”, “PTSD” 등의 심리학적·정신의학적 개념이 자신의 경험이나 증상을 설명하는 강력한 언어로 소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회에서도 이들은 많은 경우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긴장에 노출된다. 이러한 상황적 요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진단 과정에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다양한 구조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이탈주민의 행위를 설명하는 도구로 심리학적·병리학적 개념을 동원하고 “문제적” 행위를 개인 내 프로세스의 결과나 북한 사회의 문제로 환원시켜 프레임화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행위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객관적 사실로 굳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논문의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담론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기복이 심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후진적인” 존재로 논의된다. 그리고 동시에 “신체적” “정신병적” 질병이 있는 병리적인 존재로, “치유되어야 할 대상”으로 재현된다. 이 과정에

서 삭제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한국사회의 구조와 그룹 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배적인 집단, 즉 남한사람들의 역할이다. 심리화는 소수자들에게 부정적인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⁵³⁾ 그리고 그 결과는 과학적 지식과 아이디어로서 상식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필요한 대목이다.

6. 나가며

이 글은 2017년 현재 분단체제하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타자화가 단지 냉전적 분단정치의 산물이 아닌 신자유주의적 주체형성과 맞물린, 보다 복잡한 문화 정치의 결과물임을 논의하였다. 세계적 냉전 체제 해체 이전 남북한 간의 경쟁이 지배적이었던 시기 한국사회로 들어온 “귀순용사”들은 그 자체로 남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존재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남한의 신자유주의 체제로 들어온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한 주체/시민(deserving subject/citizen)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이 “민관협력”의 이름으로 “사회적 통치”에 참여해왔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한 시민, 즉 “자립자활 능력”을 갖춘 “책임감 있는” 주체로 재구성하기 위

53) Gabriel Mugny and Stamos Papastamou, “When rigidity does not fail: Individualization and psychologization as resistances to the diffusion of minority innov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10, No.1(1980). pp.43~61.

한 이러한 사회적 통치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고, 행동방식, 감정, 말투 등 이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북한적 표식은 적국의 혼적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부적절한, “우리”와 양립할 수 없는 특징들로 대두되었고, 사회적 통치의 장애물이자 치유와 교정의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탈북자 심리”는 이렇듯 북한이탈주민들을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만들어나가는 생정치 과정에서 발생한 담론이자 통치의 기술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분단정치의 정치적·문화적 기획이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 분리되지 않고, 여전히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성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통치의 참여자들이,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의 가치를 기준이자 규범으로 삼아 북한이탈주민들의 행태를 문제화하고, 이를 왜곡되고 상처받은 자아의 문제로 연결시키며, 그 근본적 원인을 북한체제에서 삼곤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 논문은 “탈북자 심리”를 단순히 객관적인 개인적 상태나 문화적 결과물로 파악하기 보다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속에 만들어지는 구성물이자 효과를 창출하는 담론으로 논의함으로써, 이를 분단정치와 접합된 신자유주의적 통치 및 주체형성과 관련된 문화정치의 기제이자 결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통치가 단순히 이들에 대한 냉전적 타자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마음의 규칙을 학습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강조하며 동시에 그 불가능성에 대한 담론을 끊임없이 만드는 연성화된 방식으로 일어남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분단체제가 그 자체로 고정된 정치적 공간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연동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마음의 상태, 새로운 통치의 정서들을 구성해 나가는 시스템임을 고찰하였다.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통치에 참여한 다양한 행위자 개개인의 선한 의지와 공적 자세, 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겠다는 입장에 기반을 둔 실천 자체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 또한 이러한 행위자 중 한 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의도나 의지와는 별도로, 이러한 실천이 보다 부드럽고 정교한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타자화와 소외의 증폭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탈북자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과 실천이 결국 다양한 기질과 사회적 위치성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을 한 덩어리로 묶어 문제적 존재로 구성하는 폭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이들이 처한 한국사회의 현실과 구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비판과 성찰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보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치에 대한 분석이 일방향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실 “주체를 구성하는 통치”에 대한 보다 나은 그림을 그리려면, 분단정치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기댄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 그리고 실천이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내면화 혹은 거부되는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참여에 의해 통치는 어떻게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또 전환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연구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에서 “탈북자 심리” 담론을 자신들의 경험을 해석하고 또 다양한 삶의 전략을 구사하는 데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 접수: 6월 27일 / 수정: 6월 28일 / 채택: 8월 1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현미 외 엮음,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서울: 이후, 2010).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과주: 돌베개, 2008).

송제숙, 『복지의 배신』(서울: 이후, 2016).

윤인진,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서울: 집문당, 2009).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서울: 오름, 2000).

_____,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하나원, 『새로운 사회생활』(서울: 양동문화사, 2008).

_____, 『새로운 언어생활』(서울: 양동문화사, 2008).

2) 논문

강진웅,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가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제45권 1호(2011), 191~227쪽.

권수현,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과 문화 논리,” 김현미 외 엮음,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서울: 이후, 2010).

금명자, “한국심리학회회의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13),” 『한국심리학회지』, 제34권 2호(2015), 541~563쪽.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49집 1호(2015), 179~212쪽.

로즈, 니콜라스(Nikolas Rose)·김환석, “니콜라스 로즈와의 만남,” 김환석 외 엮음,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경계넘기의 사회과학을 위한 탐색과 제언』(서울: 알렘, 2014).

- 박소진,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 사회』, 제48호(2009), 12~39쪽.
- 서동진,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과학』, 제 61권(2010), 37~54쪽.
- 이수정,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반도리포트』(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155~170쪽.
- _____, “‘탈냉전 민족 스펙터클’: 2000년 여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민족문화연구』, 제59권(2013), 95~122쪽.
- _____, “인도주의 분단정치: 민주화 이전 한국 사회 남북이산가족 문제,” 『현대북한연구』, 제18권 2호(2015), 121~164쪽.
- 전효관,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의미,” 『통일연구』, 제2권 2호(1998), 43~71쪽.
- 정병호, “탈북주민들의 환상과 부작용: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0권 1호(2004), 33~42쪽.
- 정승화, “감정 자본주의와 치유 문화,” 김현미 외 엮음,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서울: 이후, 2010), 163~186.
- 정향진,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제11집 1호(2005), 81~111쪽.
- 조영아,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1호(2009) 285~310쪽.
- 조영아·전우택,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0권 1호(2005), 17~35쪽.
- 조영아·전우택·유정자·엄진섭,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2호(2005), 467~484쪽.
-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귀인양식: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2권 3호(2006), 1~22쪽.
- 채정민·한성열,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9권 2호(2003), 101~126쪽.
- 한나·이승연, 2015,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 -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34권 2호(2015), 485~512쪽.

3) 기타 자료

『국민일보』, 2010년 10월 5일, “탈북자 정신치료, 2년만에 117배 급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182922&code=30802000>
(검색일: 2016년 6월 1일).

『국민일보』, 2014년 4월 7일, “르포-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첫 공개: 탈북자의 첫 거주공간 … 조사실서 운명 결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208392>(검색일: 2016년 6월 1일).

『조선일보』, 2008년 10월 1일 “올해 하나원 입소한 탈북자 74% ‘정신질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1/2008100100783.html
(검색일 2017년 6월 1일).

2. 국외 자료

1) 단행본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Translated by Richard Philcox(New York: Grove Press, 2008).

Foucault, Michel, *The Archaeology of Knowledge*(New York: Pantheon Books, 1972).
_____, *The History of Sexuality*, Vol.1: An Introduction(New York: Vintage Books, 1990).

Hall, Stuart, *The Hard Road to Renewal: Thatcherism and the Crisis of the Left*(London & New York: Verso, 1988).

2) 논문

Choo, Hae Yeon, “Gendered Modernity and Ethnicized Citizenship North Korean Settler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Gender & Society*, Vol.20, No.5(2006), pp.576~604.

- Kim, Byung-Kook, "The Politics of Crisis and a Crisis of Politics: The Presidency of Kim Dae-Jung," *Korea Briefing 1997-1999*(2000).
- Chung, Byung-Ho, "Between Defector and Migrant: Identities and strategies of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Korean Studies*, Vol.32, No.1(2009), pp.1~27.
- Foucault, Michel, "Governmentality,"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s: Studies in Governmentality*(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1), pp.87~104.
- Lee, Jung-eun. "Disciplinary citizenship in South Korean NGOs' narratives of resettlement for North Korean refugee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38, No.15(2015), pp.2688~2704.
- Lee, Soo-Jung, "Education for Young North Korean Migrants: South Koreans' Ambivalent "Others" and the Challenges of Belonging,"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4, No.1(2011), pp.89~112.
- Lippert, Randy, "Governing Refugees: The Relevance of Governmentality to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Alternatives*, 24(1999), pp.295~328.
- Mugny, Gabriel and Stamos Papastamou, "When rigidity does not fail: Individualization and psychologization as resistances to the diffusion of minority innov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10, No.1(1980), pp. 43~61.
- Park, Seo Yeon, "The Cultural Politics of Affective Bureaucracy in Service Delivery to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16).
- Rose, Nikolas, "Psychology as a Social Science," *Subjectivity*, Vol.25, No.1(2008), pp. 446~462.
- Sapountzis, Antonis and Kalliopi Vikka, "Psychologization in talk and the perpetuation of racism in the context of the Greek school,"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8, No.2(2015), pp. 373~391.
- Sugarman, Jeff, "Neoliberalism and Psychological Ethics," *Journal of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Psychology*, Vol.35, No.2(2015) pp.103~116.

- Sung, Minkyu, "The biopolitical otherization of North Korea: a critique of anti-North Koreanism in the twilight of neo-liberalism and new conservatism"(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2010).
- Uehing, Greta, "The Responsibilization of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Political Use of Psych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88, No.4(2015), pp.997~1028.

Cultural Politics of “Psychology of North Korean Refugees”: Articulation of Division Politics and Neoliberal Governmentality

Lee, Soo-Jung(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that construction of North Korean immigrants as “other” under the division system of 2016 is not only a product of Cold War politics of division but rather a more complex result of neoliberal subject production in its articulation of division politics. Before the demise of the global Cold War and in the era of compet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mall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genuinely greeted as proofs of South Korean superiority. However, North Korean immigrants who came to neoliberal system of South Korea after the Arduous March are endowed with responsibility to reborn as deserving subjects/citizens for a capitalist society. In the process, their embodied North Korean markers such as ways of thoughts, actions, and speaking, and their emotions are not only considered as legacies of enemy state but also as characteristics that are

improper to and incompatible with South Korean society. By focusing on the way how various actors of South Korea govern Korean immigrants' psychology by emphasizing how they should think, feel, and express themselves, and what they learn as a norm of maum, this paper illustrates division system is not a static political space but a system that constantly constructs new states of maum that are made anew in relation to the ever-changing capitalism.

Keywords: North Korean immigrants, North Korean defectors, division system, division politics, neoliberalism, discourse, governmentality, biopolitics, psychologization